

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성과 독자성

조선왕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이민원

제1저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한국사 전공
minwon1128@hanmail.net

강규형

교신 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사 전공
gkahng@naver.com

- I. 머리말: 광복과 건국 논쟁
- II. 대한제국: 조공국 조선에서 독립국으로
- III.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사적 연원: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독립정신
- IV. 대한민국의 건국: 미군정 3년의 진통 끝에 탄생한 민주공화국
- V. 맺음말: 미래의 통일 한국

I. 머리말: 광복과 건국 논쟁

2008년 여름 광복절 기념행사를 놓고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광복 63주년'인가 '건국 60주년'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오랫동안 광복절 행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일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의 날로, 다른 일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포함해서 광복의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광복의 의미로 제한되면서 다른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1948년 8월 15일)은 왜 기념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후 '법률일부개정안' 및 '헌법소원'으로 비화되었다.¹⁾

이와 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현재의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놓고 1919년 인가, 1948년인가라는 소재가 자리하고²⁾, 한국 근현대의 두 거인인 이승만과 김구를 기리는 사람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심연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즉 대한민국의 탄생이 언제인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혼란스럽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도 그러할 것이다.³⁾ 게다가 해방, 독립, 광복, 건국 등의 용어가 1945년 이래 현재까지 혼용되거나

1) 후자에 의해 제안된 것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며, 전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 '헌법소원청구자들의 성명서'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주영의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뉴데일리, 2011)와 『현대사광장』 2호(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의 「기획특집: 대한민국의 기원」에 실린 양동안의 「대한민국의 기원」, 한시준의 「대한민국의 역사, 언제부터 보아야 하나」, 양승태의 「국사와 문명사, 역사의식과 국가 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등의 관련 논문 참조. 그 외 논설류는 강규형, 「월슨주의를 따른 이승만, 레닌주의를 따른 김일성」, 《조선일보》, 2012년 10월 21일자; 강규형, 「8·15에 새기는 광복절의 의미」, 《한국경제신문》, 2015년 8월 15일자; 강규형, 「建國日이 없는 이상한 나라」, 《한국경제신문》, 2014년 8월 15일자; 전영기, 「헌법에서 고독사한 대한민국의 건국성」,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28면;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 논란, 근거와 논리 갖춰야」, 『광복회보』(2014. 3. 27), 5면; 김수길, 「DJ의 '건국'과 MB의 '건국」, 《중앙일보》, 2012년 8월 15일자; 김영호, 「8·15를 세계의 눈으로 보자」, 《동아일보》, 2012년 8월 15일자 등 참조.

2) 건국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설(說)'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다소 황당한 '단군 설' 등도 있다.

3) 미국에서는 연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Korean Independence Day"라 하여 이를 기념하는 축하를 한국에 전하고 미국인 및 전 세계 한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미국 측이 이해하는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로서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의 의미이다. 이영훈, 「건국 기억의 60년간의 발자취」, 이주영, 앞의 책, 44쪽 참조.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여 더욱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은 해방 직후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보였다. 한 예로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이 기념식에서 “오늘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1949년 6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었고, 4대 국경일인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중에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바꾸고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꾸는 수정안이 그해 9월에 통과되면서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4대 국경일을 절(節)로 통일하지는 취지였다. 따라서 1950년 8월 15일에는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했고, 1951년 8월 15일에는 제3회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되었다.⁴⁾ 지금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제헌의회는 1948년에 8월 15일을 독립 또는 광복으로 본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출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것은 1948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비록 미·소 합의에 의한 38도선 분할로 인해 이북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북한에서는 별개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등장하여 한반도가 양분되었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단군 이래 가장 발전된 형태로 건립된 자유민주적 질서의 민주공화제 국가임이 분명하다.⁵⁾

다만 민족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군주에게 주권이 있던 고대 왕국으로부터 국민에게 주권이 귀속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그 사이 몇 단계 중요한 전환점이

4) 1951년부터 언론에서 시작된 광복절 의미의 혼란은 결국 광복절의 정의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기에 이른다. 광복절의 제정과 용어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영훈의 『대한민국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기과랑, 2013), 179-182쪽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5)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미 단군시대에 이루어졌으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말은 앞 시대의 민족사 전체를 부정하는 반민족적 역사인식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조 단군’의 건국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 수많은 나라가 건국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다. 대한민국 건국이 단군에 의해 이뤄졌다는 견해는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있었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로 지난 100년 내외에 있었다. 그중 하나가 ‘국가의 주권’ 확립, 다른 하나가 ‘국민의 주권’ 확립이다.⁶⁾ 이 점은 오늘날 독립자주국이면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탄생의 배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대상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조선왕국,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이전의 존재들과 어떠한 관계인가.⁷⁾ 나아가 대한민국 탄생은 언제이며, 탄생의 기원(연속성)과 단절성(독자성)을 어떻게 구분해보아야 하나. 필자는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와 그의 배경을 이루는 요소들의 발전과정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탄생 시점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탄생에 이르기까지 앞 시대 역사의 발전과정 내지는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원이나 발전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출범 내지 탄생은 어느 시점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연원(혹은 배경과 기원)과 탄생을 분리해보는 방법이다.

II. 대한제국: 조공국 조선에서 독립국으로

19세기 후반 조선을 포함한 동양 사회는 이미 수평적 국제질서를 구비한 유럽 사회와 달리 여전히 강고한 중국 중심의 수직적 국제질서가 작용하고 있었다. 유럽은 만국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베스트팔렌체제, 동양은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華夷體制)였다. 중국은 문화의 중심이고, 주변은 오랑캐 나라라는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가운데, 불평등한 국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 화이체제를 구체화한 것이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책봉과 조공이다. 동양의 여러 국가 중 조선은 정치, 군사, 외교, 학문 등 각 분야에서 이 체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나라였다.

6) 이민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현대사광장』 2(2013), 6-21쪽 등 참조.
 7) 관련 논저는 이태진, 「대한제국의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 『한국문화』 22(1998); 이민원,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제29회 동양학 학술회의 강연초(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9. 10. 31); 이민원,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치 - 선포와 존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11·12(2000); 한영우 외, 『대한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푸른역사, 2006); 김명섭, 「대한제국의 역사적 종점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집 2호(2011); 서희경, 『대한민국헌법의 탄생』(창비, 2012) 등 참조.

화이체제 기반은 어디까지나 막강한 중국 문물의 힘이였다. 그래서 조공이 정례화되어 종속관계가 고착되어왔던 것이다.

이 체제의 중심인 중국의 역대 군주는 모두 황제였다. 황제는 왕 중의 왕으로서 하늘의 황제, 즉 황천상제(皇天上帝)의 아들이라 하여 천자(天子)로 불렸다. 하늘로부터 천하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논리였다. 황제는 중화 문명의 중심인 중국을 통치하고, 사방에 위치한 땅은 천자가 임명한 제후, 즉 왕이 다스리는 구조였다. 한·당·송·원·명·청 등 중국 역대 국가의 군주는 예외 없이 황제로 칭해졌으며, 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며, 각종 문물이 선진화된 중국의 힘에 비례한 권력이었다.

반면 조선의 역대 군주는 모두 왕이었다. 중국 주변의 동양 각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책봉체제하의 제후국이었던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의 왕은 황제의 책봉을 받아 백성을 다스렸다. 왕이 즉위하면 황제에게 고하고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을 받았다. 한편 주변국들은 상호 교린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는 사대의 예를, 주변국 상호는 형제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디까지나 중국의 안보를 고려한 것이었다.

중국 중심의 질서는 나름의 기능이 있었다. 중국은 대국과 소국의 예(禮)를 표방하여 주변국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도모했다. 각국도 반대급부가 있었다. 중국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대외적 안전과 정권 안정을 보장받았다. 게다가 조공무역의 이익과 앞서기는 중국 문물의 혜택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과 주변국의 타협으로 출발한 사대교린체제(혹은 천조예치체제)는 19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 틀로 유지되었다.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조선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은 아니었다.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파 인사들이 흔히 독립을 거론한 것도 그 때문이다.’⁸⁾

위와 같은 중국 중심의 질서는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전환점은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이다.⁹⁾ 1897년 대한제국 선포는 이런 상황을 틈타 한국 측이 추진한 결과였다. 일본·미국·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대한제국

8) 이상에 대해서는 John King Fairbank(ed.), *Chinese World Order—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黃支連,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北京: 中國人民出版社, 1992·1994·1995) 등 참조.

9) 藤村道生, 『日清戰爭-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點』(東京: 岩波書店, 1973).

을 승인했다. 한편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여전히 상국으로 군림하려던 청국(광서제)은 마침내 1899년 대한제국(광무제)과 평등한 조약(한청통상조약, 1899)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승인하였다. 한청통상조약은 누천년의 한중관계에서 양국이 서로를 대등한 객체로 인정한 획기적 사건이었고, 조야 인사와 독립협회가 열망했던 청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 실현이었다.¹⁰⁾ 이것은 베스트팔렌체제적 의미에서 대한제국이 청(淸)에서 독립된 주권국가가 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독립문은 바로 중국(淸)에 대한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¹¹⁾

Ⅲ.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사적 연원: 3·1운동 및 임시 정부의 독립정신

194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 맞은 감격적인 8·15해방은 남북한에 새로운 국가와 정부가 탄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¹²⁾ 미·소가 각기 남북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미·소 양국은 적국인 일본의 식민지를 점령한 것으로 인식했고, 이들은 남북한에 자국의 체제와 이념에 가까운 새 정부와 국가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점령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소의 군정은 일제하 식민통치와는 물론 다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미군정과 소군정이 3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남북한 공히 국가와 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었다. 결국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듯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완비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10) 權錫奉, 「淸日戰爭 以後의 韓淸關係研究 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1989); 李玟源, 「稱帝論議의 展開와 大韓帝國의 成立」, 『淸溪史學』 5집(1988); 은정태, 「1899년 한청통상조약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2005).

11) 그것이 일제가 독립문을 “고적 제58호”로 지정해 사적지로 보호한 이유였다.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는 대중적인 인식과 역사적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

12) 진주만 기습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선에서 일제와 줄기차게 싸운 미국과 달리 소련은 일본과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맺고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행위를 방조하다가 미국의 원자탄 투하 후에 부랴부랴 중립조약을 깨고 1945년 8월 8일 해방을 며칠 앞두고 참전했다.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 직후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고,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1948년은 근 1,000여 년간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온 한민족이 분열시대를 맞이한 해라고도 해석되기도 한다.¹³⁾ 1910년 국권을 상실한 뒤, 일제하를 거쳐 1945년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 해방을 맞은 결과는 남북의 분단이었고, 그 상태로 남북은 각기 국가를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현재의 대한민국 폄하나 반미구호로 원용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미·소 대립과 국제환경에서 비롯된 남북 분단의 상처가 현재도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은 물론, 북한으로 인해 초래되는 남남갈등과 북한 주민 자체의 끔찍한 상황도 목불인견이다. 언젠가는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 다수의 소망이다.

그렇다면 19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은 이전의 역사,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또한 그 이전 대한제국 등의 역사와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에 관해 여러 견해가 교차해왔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과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 다시 개정된 헌법 전문 내용이 조금씩 변화를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역대 정부는 물론, 국회, 학계, 언론, 일반도 모두 혼란스러웠고, 때로 모순된 입장을 보여왔음이 역력히 드러난다.¹⁴⁾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더구나 단기간에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전문은 물론, 본문 모두 만족스럽게 구성되리라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라고 하여 김일성이 창건자로 되어

13) 이런 인식을 담은 논저로는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창작과 비평사, 1978b);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2008), 574쪽 등 참조.

14) 이영훈, 앞의 논문(2011), 43-107쪽.

있다.¹⁵⁾ 북한에서는 앞 시대와 완전히 단절하여 국가가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의 국가 상징, 가령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에서도 잘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국가 상징은 조선, 대한제국 등 앞 시대 한국인의 국가 상징과는 연속성이 없으며, 일제하 3·1운동 당시나 독립운동가들이 품어온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의 상징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태극기, 대한, 무궁화, 애국가 등 조선과 대한제국 혹은 일제하 당시 국가의 상징을 이어온 점은 민족사적 연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 물론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1948년 제헌 당시나 현재의 헌법 전문에 민족사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으로 간단히 언급되고, 대한민국의 법적 연원을 강조한 내용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정도로 국한되어 있다.¹⁶⁾ 한국인의 역사가 언제로부터 유래하는 것인지 모호하고, 개천절(開天節)을 국경일로 정하고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을 나라의 교육이념으로 반영해온 점에 비하여 특히 그러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수용하고자 한 앞 시대의 주요 정신은 무엇일까.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은 정부 수립의 근거를 이렇게 언급하였다.

우리가 헌법 벽두(劈頭)에 전문(前文)에 더 써 넣 것은 「우리들 대한 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쫓겨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대 진력해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15)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

16) 북한의 헌법은 총 7장 172조이다. 1948년 9월 8일 제정되어 4차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이후로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현행 헌법은 1972년에 제정되어, 2010년 4월 10일까지 수차 개정되었다.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에서는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했다. '조선'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이라 한 것을 '평양'으로 바꾸었고,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등이 두드러진다.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

우리와 이후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¹⁷⁾

요약하면 유구한 민족사의 바탕 위에 1919년 3·1운동에 반영된 민의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의 대한민국은 3·1운동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영된 독립정신을 계승한 것을 표현한 의미로 이해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시대 여건과 참여한 인사들의 구성, 헌법조항 등에서 차이가 크지만, 정신사적으로는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1987년 개정헌법에서 명문화한 것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자 취한 조치로 보인다.¹⁸⁾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왕정복고의 복벽주의 주장을 지양하고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것은 대한 “제국”이 아닌 대한 “민국”으로의 길을 확실히 제시한 것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

위에서 보듯이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 3·1운동과 거기에 반영된 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되어 있다. 현행 헌법과 제헌 헌법을 두고 같은 점과 차이점을 두고 진행되는 논란은 필자들이 이 논문에서 논의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1919년 4월 13일(혹은 4월 11일, 9월 11일)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주장에는 선뜻 공감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외 독립단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주, 국내 등지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구비될 수 없었던 점,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점을 배제하고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인 모두의 애정과 숭고한 독립정신과는 별개로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외 남북 모두 서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각기 국가의 형태와 조직을 가지고 출범했고, 남한은 반공을,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택하여 출범한 점도 고려해볼 문제이다. 그러므로 1919년을 건국으로

17) 한시준, 앞의 논문(2013), 4-47쪽; 안철현, 「이승만 정권의 '임시정부 계승론」, 『계간 역사비평』 8(봄호)(역사문제연구소, 1990);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46(2008) 등 참조.

18) 김준엽, 『石麟 閔弼鎬傳』(나남출판, 1995), 38-38쪽.

보자는 견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그 이전 대한제국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정신사적으로나 민족사적 입장에서 공감하기 곤란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고 강력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¹⁹⁾

가령 1919년에 진정한 건국이 되었다면 이후 펼쳐진 독립운동(혹은 광복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이 미래의 건국을 대비하여 1941년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 새 민주국가의 건설, 즉 진정한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발표한 것도 온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⁰⁾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치이념으로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중요 문건이다. 참고로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 ‘건국강령’의 내용과 해설 기사를 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4년 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공포(制定公布)하였는데 그 강령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1면에 1941년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연재했다. 다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은 현재의 대한민국 탄생과정에서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보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²¹⁾

필자들은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이나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생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단계 과정이었다고 본다. 바로 그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더욱 값지다는 것이다. 비록 여러모로 취약점은 있지만, 대한제국에서 의미 있는 부분, 요컨대 독립주권 확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반영된 민주공화제, 그리고

19) 이에 대해서는 양승태, 앞의 논문, 56-61쪽 참조.

20) 《동아일보》, 1948년 12월 17일자 참조.

같은 의미에서 해방 후에 여운형과 안재홍의 주도로 설립된 건국준비위원회도 1948년 8월 28일자에 독립국가 건설, 즉 건국의 계획을 담은 ‘선언’을 공포했다. 이 선언은 “본 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제조시키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했다(강조 부분 필자). 선언 전문은 《매일신보》, 1945년 9월 3일자 참조.

21) 따라서 1919년은 미래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잉태된 시점, 1948년 8월 15일은 탄생 시점, 그리고 국제적 승인을 얻은 1948년 12월 12일은 출생 등록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를 정신사적으로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더욱 높이는 근거이기도 하다. 더불어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그에 밑거름을 제공한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의 존재와 의미를 오히려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앞 시대의 역사를 이어 현재와 미래에 이어질 한국사의 발전 도상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바라볼 때 앞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당대에 새로 추가한 것을 구분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과거로부터 축적된 자산과 그 시대에 추가한 새로운 자산이 함께 융해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과거의 자산과 연계된 것이 연속성 측면이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낸 자산에서 파악되는 의미가 독자성이라 해도 좋다.

위에 논하였듯이 중화체제하의 조선왕국에서 유엔체제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의 역사에서 한국은 중요한 두 단계 과정을 거쳤다. 대한제국은 ‘국가주권’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주권’을 확립한 셈이다. 전자는 국력은 취약했지만 국제사회에 공인된 국가였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임시정부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공화제를 명문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단계적 발전이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 국가를 출범시킨 바탕이자 대한민국의 전사(前史)였다.²²⁾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대한제국에 이르는 민족국가의 맥을 이어간 것이고, 정신사적으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에서 표출된 의회주의와 3·1독립만세운동에서 표출된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민족운동단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한국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민족사의 연속성과 맥을 부정하면 민족주의적 일체감은 물론, 영토의 역사적 연고에 관한 부분도 거론하기 어려워진다. 그 점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앞 시대로부터의 연속성과 당시대의 독자성, 그리고 미래의 지향을 함께 놓고 평가할 때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22) 이민원, 앞의 논문(2013).

IV. 대한민국의 건국: 미군정 3년의 진통 끝에 탄생한 민주공화국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고조된 19세기 후반 이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의 교차점에 위치한 한국에는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해왔다. 1876년 개항한 뒤 조선은 개화와 척사(斥邪)의 대립 속에 청국과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었다. 그러다 동학농민운동 발발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국가 권력은 급전직하로 붕괴되어갔다. 이후 러·일의 대립과 세력 균형을 틈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가체제정비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러일전쟁으로 좌절되고, 1910년에 이르러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했다.²³⁾

식민통치하에 고통을 겪던 한국인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기회로 3·1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²⁴⁾ 아울러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만주와 상하이, 그리고 국내 등에서는 여러 형태의 임시정부가 산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통합을 모색한 결과 국내의 한성정부를 계승하되, 본부를 상하이에 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 주석제 등의 변천을 보이면서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중국 내지를 전전하며 부단히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그사이 국내 한국인 대다수는 일제의 통치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항복으로 감격적인 해방을 맞게 되었다.²⁵⁾

이렇게 볼 때 1894-1895년 청일전쟁으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 불과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와 범세계적으로는 4개의 전쟁이 한국인의 운명과 직결되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그것이다. 청일전쟁은 조선왕국의 종언과 동시에 대한제국 탄생의 주요 계기였지만, 러일전쟁은 대한제국 붕괴와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이어졌다. 반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등장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자극했다. 그리고

23) 최문형, 『제국시대의 열강과 한국』(민음사, 1990);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까치, 1995); 신용하 외, 『한국사 38 - 개화와 수구의 갈등』(국사편찬위원회, 1999); 윤병석 외, 『한국사 42 - 대한제국』(국사편찬위원회, 1999).

24) 김진봉, 『3·1 운동사연구』(국학자료원, 2000).

25)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지식산업사, 2004).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인의 해방을 가져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남북한에 각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이 중 북한의 경우는 소련의 지원과 통제로 일사불란한 진행을 보였지만, 남한은 우여곡절이 극심했다. 3년간의 미군정하에 반탁운동이 전개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가 극심렬게 대립하는 가운데 1948년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해방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시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자칫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²⁶⁾ 그런 혼란 속에서 해외독립운동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남북한 양쪽에 탄생하는 정부에 공식적 권한과 업무를 승계시킬 수도 없었고, 남북한의 국가 탄생과 정부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없었다. 다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이시영, 신익희, 이범석 등 임시정부의 각료를 지낸 인사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과 초대 내각 등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4개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쟁은 한국인의 대응 능력과 국제적 여건에 따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하고, 정부와 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의 과정에서 국가 혹은 정부의 붕괴와 탄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법상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을 구비한 국가로서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것은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한민족이 탄생시킨 최초의 완성된 국가였다.

해방 이후 3년간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는지는 여러 연구자가 잘 밝히고 있다. 1948년 역사적인 5·10선거가 유엔 감시 아래 치러졌다. 이 선거는 당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세계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보더라도 결코 손색없는 수준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한 예로 여성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당시 스위스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북한식의

26) 이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0년 망국 이래 꿈이었던 자주독립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뉴데일리, 2011), 108-137쪽; 이인호, 『세계사 속의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세종연구원, 2013), 32-63쪽 참조.

‘흑백투표’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오천 년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행사한 첫 번째 선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때 왕국 혹은 제국의 신민(臣民)으로 살던 사람들이 비로소 주권을 가진 국민(國民)으로 명실상부하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5·10선거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비록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뤄진 지역의 관할권만 갖는 정부였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상의 베스트팔렌체제에서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가진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었던 것이다.²⁷⁾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은 북한의 6·25남침과 이후 지속된 공세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왔다. 돌이켜 보면 6·25남침 역시 대한민국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유엔이 연합군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6·25남침 당시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도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유지와 발전은 미·소 양대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진행되던 과정에 동족상잔인 6·25전쟁의 참화 등을 겨우 딛고, 이후 민관군(民官軍)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가까스로 오늘의 발전과 번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7) 베스트팔렌체제와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김명섭, 「탈냉전기 세계체제와 국가주권」, 『세계정치』 25집 1호(2004) 참조.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 샤흐요 궁(Palais de Chaillot, 사요 궁이라고도 불림)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공산권을 포함한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유엔결의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루어진 38선 이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아울러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도 상당히 선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북한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대해서는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승실사학』 제30(2013), 253-280쪽; 허동현,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2009), 337-375쪽; 정경희·강규형,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1(2015), 121-123쪽 참조. 국사학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고 훗날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3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국가였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독자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임정의 헌장을 그대로 승계한다거나 임정의 의정원이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내각에 참여한다는 절차는 없었다. 현실 정치와 국제법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1948년에 탄생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과 정신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3·1운동의 결과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명문화한 국민주권,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 당시 확립한 국가주권의 바탕 위에 탄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²⁸⁾

V. 맺음말: 미래의 통일 한국

최근 10여 년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극단을 보여온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반에게 혼란을 가져온 해방, 광복, 독립, 건국 등의 개념 정립,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혹은 대한민국 수립²⁹⁾)에 대한 보다 원숙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혹은 이들 논쟁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과 매도가 등장하여 곤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성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면 학생과 일반을 피곤하게 하는 한국사 대신 긍정적이면서도 환영받는 한국사가 될 것이다.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다양한 주장과 합리적 논거는 한국근현대사의 이해를 한층 격상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결과는 모두의 공이라는 포용적 이해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주제는 결론을

28) 이 글의 필자들은 대한민국은 1919년 수태되고, 임신과정을 거쳐 산고(産苦) 끝에 1948년 탄생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9) 흔히 통용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여러모로 적당치 않은 서술이다.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들은 북한체제의 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 서술하는 반면 대한민국 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국가의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립으로만 격하될 여지가 생긴다. 또한 만약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에서 정부를 국가라고 해석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國)”에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불필요한 수식이 중복되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학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먼저 내리고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역사학, 법학, 정치학, 외교학, 철학 등 다방면에서 거시적·미시적 검토가 절실한 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논란과 갈등은 현대사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념의 혼란을 경험한 데다가 6·25전쟁과 이후의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다양한 생각이 교차한 결과로 여겨진다.

8·15해방과 이후 3년간을 거쳐 탄생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된 독립, 광복, 해방, 건국이라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체제와 국력, 이념이 어떠한 남북의 입장에서 각기 국가를 건설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반쪽의 국가 건설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945-1948년 사이는 남북한의 입장에서는 해방, 독립, 건국의 완성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흔히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1945년 이래 분단된 남북의 민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통일된 민족국가로 가는 도정의 실험, 요컨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방식과 북한의 공산주의식 내지는 북한식 ‘주체적 사회주의’의 실험일 수도 있다. 이제 어느 선택이 바람직했는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탄생은 38도선 이남에만 국한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완성되는 날 진정한 광복이 이룩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해방 이후 남북한의 국가 탄생과정에서 어디에서도 설 자리를 갖지 못했던 김구, 조완구 그리고 독립운동 당시 임시정부를 떠나 무정부주의를 지향했던 이회영, 신채호 등의 입장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³⁰⁾ 이 중 김구는 이승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북협상에 임하여 대한민국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김일성의 정략에 호응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점은 후일 장기집권과 자유당의 부패로 이승만이 비판받는 것만큼이나 아쉬운 부분이며, 남남(南南) 갈등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탁통치를 반대하며 반공의 노선에서 호형호제하던 두

30) 이들과 관련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노경채, 「임시정부의 이념과 노선」, 『계간 역사비평』 겨울호(역사문제연구소, 1990); 최창동, 「헌법전문에 있는 ‘상해임정 범통계승론’의 문제점 小考」, 『정책연구』 통권 147호(겨울호)(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5); 이정규·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을유문화사, 1985); 이민원, 『조완구-대종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역사공간, 2008); 윤대원, 「임시정부 범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나남, 2010) 등 참조.

거인이 균열을 보인 근본 배경에는 ‘독립운동가이자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이승만과 ‘독립운동가이자 이상주의적 민족운동가’ 김구의 인식 차이도 있지만, 해방정국의 혼돈과 테러, 북한의 공작 등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소에 의한 남북 분단 현실을 인정하여, 각기 노선에 따라 신생국가의 건립을 추진했다. 이승만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고, 김일성은 김정은까지 3대로 이어지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기초를 놓았다.³¹⁾ 반면 김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한 이상을 심어놓았다. 내외정세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 노선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우선하여 국가의 기초를 다진 이승만, 당시로서는 비현실적이었지만 통일을 강조한 김구, 양인의 선택에 괴리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민은 마찬가지로였다.³²⁾ 미래의 ‘통일 한국’은 가능한 현실을 택한 이승만과 이상을 택한 김구는 물론, 이회영, 신채호 등 임시정부와 노선을 달리했던 여타 독립운동가들과 국내외 한국인 모두가 소망하는 격조 높은 선진국이 될 것임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필자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³³⁾

지난 한 세기여 동안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바는 주권을 가진 독립된 근대국가로의 이행이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하 식민통치를 거치는 가운데 많은 선각자들의 노력 속에 대한민국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후 8·15해방이란 절호의 기회를 맞아 3년간의 진통 끝에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고, 현재에 이르는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되었다.³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그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숙성되어가는 발전적 역사였다.³⁵⁾

31) 유영익, 『건국 대통령 이승만』(일조각, 2013).

32)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1·2·3(나남, 2008).

33) 우당 이회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정부조직 형태는 지위와 권력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몽양 여운형도 주권, 영토, 국민 중 어느 한 가지도 없는 상태에서 명목만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부 수립 대신 정당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한울, 1995); 김길자·김효선 편,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옥계출판사, 2013), 129-130쪽.

34) 강규형, 『대한민국, 가까운 오늘의 기록』(이담, 2013), 151-152쪽.

35) 이병희·강규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교육』 48권

그런 의미에서 1919년을 ‘정신적 건국’이라 칭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 대한민국 건국까지는 수차의 단계(1919년 임시정부,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탄생 혹은 실질적 건국)를 거쳤다.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호(2009), 12쪽.

참 고 문 헌

- 강규형, 「윌슨주의를 따른 이승만, 레닌주의를 따른 김일성」. 《조선일보》, 2012년 10월 21일자.
- _____, 『대한민국, 가까운 오늘의 기록』. 이담, 2013.
- _____, 「建國日이 없는 이상한 나라」. 《한국경제신문》, 2014년 8월 15일자.
- _____, 「8·15에 새기는 광복절의 의미」. 《한국경제신문》, 2015년 8월 15일자.
- 강만길, 「대한제국의 성격」.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8a.
- _____,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8b.
- 具汰列, 「大韓帝國時代の 國際關係」. 『大韓帝國研究』 3,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1985.
- 權錫奉, 「淸日戰爭 以後의 韓淸關係研究 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김길자·김효선 편,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옥계출판사, 2013.
- 김명섭, 「탈냉전기 세계체제와 국가주권」. 『세계정치』 25집 1호, 2004.
- _____, 「대한제국의 역사적 종점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 2011.
- 김수길, 「DJ의 '건국'과 MB의 '건국」. 《중앙일보》, 2012년 8월 15일자.
- 김영호, 「8·15를 세계의 눈으로 보자」. 《동아일보》, 2012년 8월 15일자.
-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對하여」. 『歷史學報』 32집. 1966.
- 김준엽,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 김진봉, 『3·1 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 노경채, 「임시정부의 이념과 노선」. 『계간 역사비평』 겨울호, 1990.
- 서희경, 『대한민국헌법의 탄생』. 창비, 2012.
-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1·2·3. 나남, 2008.
- 宋炳基, 「光武改革研究-그 性格을 中心으로」. 『史學志』 10, 1976.
- 안철현, 「이승만 정권의 '임시정부 계승론」. 『계간 역사비평』 8(봄호), 1990.
- 양동안, 「대한민국의 기원」. 『현대사광장』 2, 2013.
- 양승태, 「국사와 문명사, 역사의식과 국가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현대사광장』 2, 2013.
- 유영익,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 윤대원, 「임시정부 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 윤병석, 『대한과 조선의 위상』. 선인, 2011.
- 은정태, 「1899년 한청통상조약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 2005.

- 李求鎔, 「大韓帝國의 成立과 列強의 反應」. 『江原史學』 1집, 1985.
- 이명희·강규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 48-1, 2009.
- 李玟源, 「稱帝論議의 展開와 大韓帝國의 成立」. 『淸溪史學』 5집, 1988.
- _____,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 _____,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치 - 선포와 존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11·12, 2000.
- _____, 『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1.
- _____, 『조완구-대종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공간, 2008.
- _____,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현대사광장』 2, 2013.
- 이영훈, 「건국 기억의 60년간의 발자취」.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뉴데일리, 2011.
- _____, 『대한민국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과광, 2013.
-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뉴데일리, 2011.
- _____, 「세계사 속의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세종연구원, 2013.
- 이주영 편,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뉴데일리, 2011.
- 이대진, 「대한제국의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 『한국문화』 22, 1998.
- 전영기, 「헌법에서 고독사한 대한민국의 건국성」.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 全海宗 외,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 정경희·강규형,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1, 2015.
-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한울, 1995.
- 최문형, 『제국시대의 열강과 한국』. 민음사, 1990.
- 최창동, 「헌법전문에 있는 '상해임정 범통계승론'의 문제점 小考」. 『정책연구』 통권 147호(겨울호), 2005,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프랑시스 레이 저, 최종고·남효순 역,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日本の 大韓帝國 強占』, 까치, 1995.
-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46, 2008.
- _____, 「대한민국의 역사, 언제부터 보아야 하나」. 『현대사광장』 2, 2013.
- _____, 「대한민국 '건국' 논란, 근거와 논리 갖춰야」. 『광복회보』, 2014. 3. 27.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2008.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푸른 역사, 2006.
- 허동현,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승실사학』 30, 2013.

奥村周司, 「李朝高宗の皇帝即位について-その即位儀禮と世界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3, 1995.

月脚達彦, 「大韓帝國 成立前後の對外的態度」. 『東洋文化研究』 1, 1999.

張啓雄, 「中華世界帝國與琉球王國的地位-中西國際秩序原理的衝突」. 『第三屆中琉歷史關係 國際學術會議論文集』, 台北: 中琉文化經濟協會, 1991.

黃支連, 『天朝禮治體系研究』 上·中·下. 北京: 中國人民出版社, 1992, 1994, 1995.

John King Fairbank(ed.), *Chinese World Order-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Lensen, George Alexander,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2 vols.,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동아일보》, 1948년 12월 17일자-1948년 12월 19일자.

《매일신보》, 1945년 9월 3일자.

국 문 요약

최근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1948년의 역사적 의미를, 후자는 1919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른 쪽의 주장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와 그 배경을 이루는 요소의 발전과정을 구분해보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출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분명 1948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1948년은 국가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창조적 내지는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역사적 연관 속에서 발전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전자는 중화체제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후자는 왕의 신민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확립했다. 대한민국은 이런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1945년 해방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여 국민·영토·주권을 확립해 탄생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의미를 중시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과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상의 중요한 존재이자, 그러한 존재로 인해 오히려 서로의 의미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투고일 2015. 11. 10.

심사일 2016. 1. 26.

게재 확정일 2016. 2. 25.

주제어(keyword)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제국(Korean Empire), 대한민국 건국(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중화체제(Middle Kingdom system), 베스트팔렌체제(Westphalia system)

Abstracts

Continuity and Peculi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Republic of Korea

Lee, Min-won, Kahng, Gyoo-hyoung

Recently there have been disputes in Korean society and academia o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one hand, August 15th of 1948 is regarded as the birthday of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irth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s the birthday. The first stresses the historic importance of 1948 while the second the symbolic meaning of 1919. This kind of disputes, however, is caused by the standpoint that neglect development processes of elements of the backgrounds of the launch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a democratic republic launched and was approved internationally in 1948. 1948 thus has the creative and sole meaning of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by having the necessary elements of a state. However, it cannot be also denied that the present Republic of Korea had been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Korean Empire in 1897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1897 meant the acquisi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ndependent from the Middle Kingdom system, and 1919 meant the establishment of elements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not as subjects of a k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in lieu of this developmental processes taking advantages of the opportunity of liberation in 1945.

Therefore,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while cherishing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Likewise we do not need to underestimate the meaning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le cherishing only the meaning of the 1948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ose are all important elements in Korean history, and each reinforces each other's importances.